

국민의당 대선백서 ‘수정 없이’ 내일 공개



“열심히 뒤통수칩니다”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30일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오전 일정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서 현장 최고위 개최...安 책임론 정면 돌파키로 주요 당직 인선...사무총장 김광영·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이 대선평가보고서를 수정 없이 전문을 공개, 안철수 대표에게 쏟아지는 대선 패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당은 당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광영 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하며 지방직 최고위원 외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30일 경기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우선 “5·9 대선 패배 원인을 성찰하는 대선평가보고서를 수정이나 첨삭 없이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개 일시는 다음달 1일 오전”이라고 전했다. 이는 안 대표가 최고위원

들과 상의해 결정한 것으로, 자신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 평가보고서에 대선 후보였던 안 대표의 책임론이 어느 수준까지 명시될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앞서 지도부는 대선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8·27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개를 유보한 바 있다.
이에 전대 당시 안 대표를 제외한 후보들은 ‘지도부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고려하며 ‘감감’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보고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안 대표가 이런 반발을 전화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보고서를

공개, 맞을 때는 맞더라도 논란을 빨리 털어버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주요 당직 인선도 결정됐다.
사무총장에 김 의원이 임명됐고 정책위의장에는 이용호 의원이 유임됐다.
손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의 경우 지방선거까지 자리를 유지하며 당무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당무에 밝은 현역 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정책위의장에게는 국민의당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정기적인 정책 최고위원회 개최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송기석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손 수석대변인은 유임됐다. 아울러 김철근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과 이형자 부대변인이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며,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유임됐다.
김 사무총장(전북 군산), 이 정책위의

장(전북 남원·임실·순창), 손 수석대변인(나주·화순), 송 비서실장(광주 서구갑) 모두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김 대변인은 고흥 출신으로 안 대표가 전대 출마를 결심하기 전, 안 대표의 출마를 요구하는 지역위원장 109명의 서명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호남을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호남 출신 지역구 의원이 대부분인 당사정당 당연한 것이라 해석도 있다.
또 사무총장에 당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비서실장에는 최측근 인사를 기용한 점,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은 유임했다는 점에서 당이 위기에 처한 만큼 안정감을 우선해 인선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방직 최고위원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손 의원은 “지방직 최고위원은 추천을 받고 결정할 예정이다. 최고위에서는 적극 추천해 달라는 안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손금주 “국방부 5·18 진상조사, 발표명령자 규명·집단 매장지 발굴 빠져”

조사 범위 확대 요구
국방부의 5·18 진상조사가 헬기 사격과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규명에만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80년 5·18 당시 발표 명령자를 찾아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3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범위 등’을 분석한 결



손 의원은 “국방부 조사범위는 당시 헬기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 등 두 가지뿐이었다”고 말했다.

과 조사대상에 진상 조사의 핵심인 ▲발포 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조사 ▲집단매장지 발굴 등이 모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진상조사에 발표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기무사가 보관중인 모든 기밀문서 역시 빠짐없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답변과 다르게 조사범위를 축소한 것은 ‘5·18 발표

명령자를 찾아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사범위 축소는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픈 진실을 밝혀내려 했던 국방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진상조사가 결국 국방부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범위에 발표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일기자 cki@

“5·18 헌법 수록 바른정당이 앞장”

하태경,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바른정당 바른비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록 바른정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5·18과 함께 부마항쟁, 6·10 항쟁까지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록 바른정당이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가 빨갱이로 매도했던 과거사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5·18에 대한 중복몰이에도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얼마 전 나는 전두

환 회고록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유언비어가 버젓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며 “중복몰이 정산에 바른정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광주시청에서 열린 5·18 유족회 헌법제정 추진을 위한 5·18 유족회와 5·18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5·18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들었다.
이날 바른정당의 광주 부문에는 정은원 최고위원,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하현식 광주시당위원장, 이금채 전남도당위원장 등의 당직자가 함께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전남 당원 가입 폭증

대선 후 3만2천여명 증가...복당은 485명 늘어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0%를 상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 권리행사 기준일이 9월말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을 중심으로 당원 배가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어 광주·전남 민주당 당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대 대선 이후 지금까지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에 신규로 입당한 당원만 3만 1890명(광주 1만1890명·전남 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복당한 당원은 485명(광주 230명·전남 2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민주당원 숫자는 64만명에 이른다. 19대 대선 이후 3개월만에 3만명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광주시당은 현재 전체 당원 숫자가 25만 6897명이며, 이 가운데 당비를 약정한

당원은 5만 207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당의 전체 당원은 38만명으로, 당비 약정 당원은 12만 7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 직후에 비해 광주시당의 경우 당원 숫자는 1만 4000여명이 늘었고, 당비 약정 당원 숫자도 1만 7000여명이 증가했다. 전남도당은 20대 총선을 전후해서 36만명이던 당원이 19대 대선 이후 2만여명 늘어났다. 이처럼 당원 입당과 복당이 이어지면 시·도당은 상근 인력을 모두 투입해 입당원서를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입당원서 숫자만 1만여장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 이전에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탈당한 당원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신규 입당한 것으로 집계된다”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당비를 신규 약정하거나 약정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당원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일기자 cki@

“선출직 공직자 공직활동 평가하자”

민주 지방선거기획단 제안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이춘석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중앙당 및 각 시·도당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 당규에서 지방선거 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구성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구성 시한이다.
중앙당 평가위는 시·도지사를, 시·도당 평가위는 기초단체장 이하의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 활동을 각각 평가하게 된다. 평가기준과 방법은 중앙당 평가위에서 안을 마련하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평가 결과는 공천 심사에 반영된다.
선거기획단은 또 다음달 1일 최고위원회에 사고 당부(장관 인각, 청와대 파견 등)로 위원장이 공적인 시·도당 정비도 제안하기로 했다.
백해련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와 공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권위된 시도당 위원장은 조속히 정비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정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일반물건

-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 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 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성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서구 치평동 소각장 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증 가능 매매가 17억
- ▶서구 마곡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 ▶서구 마곡동 연화아파트 인근 126평 매매가 5억2천
- ▶서구 마곡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인근 46.2평 매매가 3억
-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전 도로점 토지 200평 매매가 1억5천만원
-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 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